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10/ 28 통권 1490호

CEO·CFO·COO· 회계책임자· 조세전문가· 재경실무자· 총무담당자·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명확한 권한, 책임이 생산성 높인다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직장인의 퇴근 후 검직과 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의 겸
직 더블인컴 창출 주의점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방법
- 2020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
금정보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
례 추가 공개
-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
회의 의결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외국법인과 수탁가공계약 체결 후 가공용역 제공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 인도시 영세율 적
용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중소기업 등 법인 세무조사 비용부인·손금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차이 >

개념, 비교	익금산입, 비용부인 유보처분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세무조사 결과의 판단개념	접대비 과다, 적격증빙불비 등	별도의 개인계좌 입금, 사업자계좌 이외 이탈 거래
회사의 회계 처리 계정과 향후 분개결과 예시	법인계좌입금, 예수금, 선수금 반영 후, 전기손익 수정이익처리 차) 선수금 × × × 대) 기타수입 × × ×	다른계좌 입금, 법인계좌 입금되어도 가 수금, 특수관계미지급금, 대표 등 특수관 계좌 차입금으로 반영 → 향후 전액 개 인지급으로 추정됨 차) 특수차입금 × × × 대) 현금예금 × × ×
세무조정 결과	익금산입유보반영 후, 회사가 기타수 입 회계반영 계상시 ⊖ 유보로 상쇄 시킴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대표자 급 여에 가산 반영함
관련 세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매입부가세(공제)는 추징 : 10% + 가산세 4% •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등 22%×가산 세 등 1.5배 = 33% • 총 부담세금 : 47%(=1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는 좌동 14% • 익금산입법인세 좌동 33% • 대표자 등 상여처분 : 한계세율 35% 내외×1.5배 = 52.5%×1.1 = 58% • 총부담세금 = 105%(14+33+58)
대표자 건강보험료 등	없음	상여처분×6.67% 추가
총부담율	약 47%(개인사업자는 80%)	약 110% 이상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490 호 / 주간 44호

2020. 10. 28.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중소기업 등 법인 세무조사 비용부인·손금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차이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직장인의 퇴근 후 검직과 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의 검직 더블인컴 창출 주의점	2
C E O 에 세 이	명확한 권한, 책임이 생산성 높인다	3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이에 따른 다름은 세법에서 관여하지 아니함 - 회계기준의 구체적 요건충족여부는 귀사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전공지후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함 - 자산의 경제적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등의 지출에 한해 자본적 지출로 반영함	5 6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방법	7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국제시장 역량 강화 대책 개인투자용 국제 상품	9 10
직 장 인 Survival	목표를 적극적으로 만든다	11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법령부가-327, 2020.04.16) -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법인-99, 2020.03.25)	12 13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관세청,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수출 도전하세요"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외국법인과 수탁가공계약 체결 후 가공용역 제공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 인도시 영세율 적용됨	12
세 무 정 보	- 2020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15
회 계 정 보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37
노 무 정 보	-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46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3

직장인의 퇴근 후 겸업과 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의 겸직 · 더블인컴 창출 주의점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환경 : ① 온라인 유통 활성화(무역, 도소매), ② 유튜브와 SNS홍보 번성, ③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촉진, ④ 단일소득으로 생계 어려운 형편 증가함

개념, 구분	일반적인 경우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겸직가능과 허용	① 일반직장(근로기준법에 불가능규정 없으며, 근로계약상 근무시간만 명시) ②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규정(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감사인 등 조직운영규정 제3조 ① 성실 · 공정 의무, 품위에 명예 손상 아니면 가능 ② 영리사업창업, 타사 임원 · 직원 가능(한공회 허가)
겸업(동일업무 경쟁) 피지	• 이사의 겸업금지(상법 제397조) - 동종업종 수행불가, 이사업무 안됨 •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규정은 없음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해당 회계법인 업무범위의 업무수행 금지(회계사법 제35조)
더블인컴창출 사업분야	본인 직장 업무와 다른 분야의 사업활동	회계사 본업(회계감사, 세무대리, 경영자문) 아닌 다른 분야
다른사업 수행방법, 시간	근로계약서의 정상 근무시간 이외 업무(야간 또는 휴일)	비지시준(11월~3월) 이외의 휴한기(5~10월)와 현직장 업무종료 퇴근후 야간 휴일 활용
사업자등록 · 법인 여부	타직장이면 사업자등록 불필요(본인 또는 배우자 지원)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등록(유통, 도 · 소매 등 위주로)
홍보, 안내, 마케팅	온라인 SNS, 페이스북, 유튜브 등	좌동
매출, 소득 발생시	부가세신고서, 본인근로소득+별도사업소득 종합합산	회계법인근로소득+별도 사업소득 합산신고
일반적인 고지현황	회사에 잘 알리지 않음	한공회 허가와 회계법인 대표동의 등

명확한 권한, 책임이 생산성 높인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 (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IMF전후 수많은 재벌과 대기업이 광음을 내며 쓰러지면서 국민의 짐이 되어 왔다. 거짓과 부정과 비리의 산물이기도 하고 오너 취향이나 독단의 결과이기도 한다. 또 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망해 자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월급쟁이 세계에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뚜렷하지 못했던 기본적 풍토를 빼놓을 수 없다.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이 마치 무정부적 경영이 만연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안일 무사를 조장하고 자율정신을 갉아먹은 것이다.

한국기업에서는 권한도 없이 엉뚱하게 책임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기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예사롭게 일어나는 기업 풍토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아직도 뚜렷이 느껴지지 않는다. 상사에게 결재를 모두 받고 시행한 일일지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만 당하기 일쑤다. 층층이 결재한 상사들은 어물어물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데 도사다. 그게 아마 월급쟁이 밥그릇 숫자만큼 노련해 졌다는 증세일 것이다.

상사는 상사대로 심지어 협조 부서에서도 참여는 물론 실컷 시시콜콜한 간섭과 통제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책임질 때는 만만하고 약한 송사리 직원 하나를 날리는 게 보통이다. 권한도 없고 책임도 뒤죽박죽이다. 목소리 큰놈이 장땡인 경우가 많다. "뻥"이라도 든든하면 막히는 게 없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떠돌이 쫓기는 식이다.

이런 공정치 못한 관행이 일반화 될수록 기업의 생명력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판국에 누가 건강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것이며, 소신을 펼 수 있겠는가. 인간 누구든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윗사람의 의중을 파악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월급쟁이의 생존 조건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나아가서는 자기 소신으로 착각

할 수도 있고 또 대세파악의 유능함(?)으로까지 생각하게 된다. 한국 기업의 화이트칼라, 월급쟁이 세계의 단면이 아닌가를 냉철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권한이 뚜렷해야한다. 주어진 권한의 내용이 실제적이고 자타가 모두 인식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 일의 성격상 제품개발 같은 분야는 특히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사업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제품력이다. 얼마나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적기에 시장에 내놓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필자는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신발은 좀 아는 편이지만 그것도 해외영업이지 직접 생산에 관한 부분은 아니다. 더구나 Fila의 또 다른 주력품목인 의류분야는 더 생소하다. 그러나 사업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우선 순위를 매겨 놓고 있다. 제품개발, 품질관리, 영업, 전산화, 직원들의 교육과 신속한 애프터서비스 순서다. 제품개발은 최우선 순위다.

따라서 예산의 한계를 두지 않는다. 개발을 위해 드는 비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 Fila 코리아의 개발부 직원들은 완전히 프리개념으로 일한다. 해외출장도 자기들이 결정하지 사장인 필자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해외 패션쇼 등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필자의 결재 없이 알아서 다녀온다. 단, 자유로운 만큼, 권한만큼 대신 결과가 있어야 한다. 결과가 없을 땐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 그만큼 무섭다. 제품개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맡긴다. 그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필자의 원칙이다. 여기에 대해선 그 쪽 직원들도 전혀 이의가 없다.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이에 따른 다툼은 세법에서 관여하지 아니함

Q 2020년 7월, A사(매출자)와 B사(매입자)는 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사는 7.13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두 회사간 계약금액은 4천만원이었으나 매출자인 A사는 일방적으로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A사와 B사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가액이 과대기재되어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B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은 어떻게 있나요?

A 공급가액의 다툼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다른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은 합의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소송 등의 법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나 귀사 입장에서 매입세액이 과다하므로 신고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매입세액 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며 매입세액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므로) 추후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해결되는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계기준의 구체적 요건충족여부는 귀사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Q 본원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홈페이지는 구체적인 예약기능(ex A교수 10시 예약)을 갖출 예정이며, 병원특성 상 예약 성립이 곧 수익창출이나, 홈페이지 상에서 예약금에 대한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것이 기준서에서 말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로인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것이 호텔 방 예약 시스템과 같다고 보고있으며, 호텔의 홈페이지가 무형자산이라고 하면 본 원이 개발 예정인 홈페이지 역시 무형자산으로 인식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는 홈페이지가 아닌 단순 예약기능만 있는 웹사이트는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사가 개발하려는 홈페이지의 예약기능이 구체적 재화나 용역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으며 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 구체적 사실을 문의하시어 인식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전공지후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함

- Q**
1. 특정요금제를 결제를 하는 고객에 한하여 결제한 금액만큼 상품권 등으로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2. 기존회원이 신규회원을 유치할 경우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각 각에게 상품권 지급을 하는 이벤트
- 각 건에 대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A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전에 공지하고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일종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 2 모두 사전공지하고 불특정다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산의 경제적가치가 실질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등의 지출에 한해 자본적 지출로 반영함

- Q**
1. 형제, 용도 자체가 완전히 변경
(예. 냉장고-> 세탁기)
 2. A를 생산하던 연삭기를 B를 생산하기 위한 연삭기로 개조
 3. 2번의 경우 자산의 가치증가가 아닌 단순 다른용도로 사용하기위한 개조
1. 2. 3번 다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유형자산의 취득후의 지출이 생산능력의 증대, 내용연수 연장 등을 초래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본래 자산의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 형제, 용도가 완전히 변경되면서 내용연수도 증가되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원래의 자산의 경제적 가치나 내용연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매출할인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할인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금액에 대해 과세하였었는데, 2007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과 맞추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조기 수금에 따른 매출할인이 생기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고, 최초 거래시 징수한 부가가치세도 되돌려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된다.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매출할인이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후 그 공급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약정기일전에 영수함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과 관련된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매출할인액은 대금의 조기수금에 대한 할인이므로 거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완료된 후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른 할인액만큼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최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할인된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차감되는 사유한 발생한 날, 즉 공급대가를 조기회수해서 할인이 확정된 날에 공급자가 해당 할인액 만큼에 대해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면 된다.

- ❶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에서는 매출감액으로 인식하였으나,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감액으로 인식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매출할인도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매출액에서 감액하므로 매출에누리와 똑같이 회계처리하면 된다.

즉, 조기 수금에 따라 할인금액이 발생되면 매출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판매시점

차) 외상매출	1,100	대)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회수시점 (조기수금에 따라 할인)

차) 현금	1,045	대) 외상매출	1,100
매출할인(매출⊖)	50		
부가세예수금	5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자영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구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업자	모든 사업자	과세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
납세방법	사업자가 직접 세액 산출해 신고 납부	
세금 부담자	사업자	소비자
세금 납세자	사업자	
과세대상	사업자 소득의 합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
세율	6~42%	10%
과세기간	1년(1월~12월)	6개월(1기 : 1~6월 / 2기 : 7~12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세무일정	확정신고 : 매년 5월	확정신고 : 1월, 7월
	예정고지 : 매년 11월(작년 확정신고 금액의 절반)	예정고지 : 4월, 10월(작년 신고금액의 절반)



배당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금융상품

상품	내용
연금 펀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인출할 때 3.3~5.5% 과세
ISA	이자 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토털리턴형 ETF	배당소득 발생 시점 조절 가능
브라질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비전	일류 선진 국채시장으로의 도약
4대 전략	10대 과제
탄탄한 수요기반	①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역량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 등에 대한 PD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개편 • 중위권까지 공자기금 금융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 입찰 리스크 완화를 위한 낙찰금리 차등구간확대 • 우수PPD의 PD조기승격을 위한 Fast-track 제도 신설
	②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 및 자금 유출입 안정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 결정 위한 사전검토 착수 • 주요 투자자 협력채널 구축 및 IR강화 •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별 정보 및 대응체계 운영
	③ 개인 국채투자 유인 및 관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저축 목적의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 추진 • 소장가치가 있는 소액 실물 기념국채 발행 추진
효과적 공급전략	④ 시장 수급을 고려한 국고채 Line-Up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량증가 부담의 분산을 위해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 시장수급 여건을 고려한 20년물 물량 탄력 조정 • 시장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물별 발행비중 조정 검토
	⑤ 발행물량의 변동성 완화 및 시기별 적정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 방식 신규 비경쟁인수(IV) 도입 • 국채 투자자금 소요 분산을 위한 국고채 입찰일정 개편
	⑥ 기 발행채권에 대한 탄력적 차환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 발행한도 관리방식 개선(총 발행액 → 순 발행액)
안정적 시장운영	⑦ 대내외 충격에 대한 국채시장 대응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전문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 '22년 도입 • 국고채 전문딜러의 호가조성 의무이행 방식 보완 • 시장안정 목적 긴급 조기상환 및 교환제도 신설 • 국채시장 이상징후 진단기준 및 상황별 대응조치 마련 • 단계별 다층적 시장소통채널 확립
	⑧ 물가채 및 유관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채 발행방식을 비경쟁인수 → 경쟁입찰로 변경 • 스트립 통합제도 적용범위를 이자 → 원금스트립까지 확대 • 30년 국채 선물 도입 중장기 검토
전문적 지원기반	⑨ 국채 전문 연구기능 강화 + ⑩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만든다

하버드대학에서 25년에 걸쳐 목표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IQ, 학력, 환경 등 유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7%는 목표가 없었고, 60%는 불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는 명확하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만 세운 상태였으며, 단 3%만 명확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점은 분명하고도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던 3%의 사람들은 기업의 CEO, 사회 저명인사, 정치지도자 등으로 성공한 반면,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온 27%는 거의 대부분 최하층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분명하기는 하나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의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기업 임원등 전문가로 성장하여 사회의 상류층이 되었으며, 불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60%의 사람들은 사회의 중하류 계층에 주로 밀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인터넷마케팅에 대한 실무형 도서를 올해 안에 1권 쓰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것 자체로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선 것입니다. 목표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을 쓰겠다'라는 목표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인 동시에 스스로를 채찍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 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외국법인과 수탁가공계약 체결 후 가공용역 제공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 인도시 영세를 적용됨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
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
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
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사전법령부가-327, 2020.04.16

■ 질 의

- 신청법인은 의류 제조업,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 2020.1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과 수탁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의류반제품에 제
조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 보풀제거, 주
름가공 등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지정
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제품을 인도하기
로 하였으며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예정임
- * 국내 다른 사업자는 공급받은 의류를 국내
에서 판매함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탁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
은 의류 반제품을 가공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를 적
용 여부

■ 회 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
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
된 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
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
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
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
례제한법」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
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나, 귀 법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
하류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법인-4076, 2020.02.27

■ 질 의

-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기능의 제어가 자
동으로 조절되는 잔사유고도화시설(Residue
Upgrading Complex, RUC) 및 올레핀하류시
설(Olefin Downstream Complex, ODC)이
-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 제1항 제6호의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
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
상인지

■ 회 신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
절되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
인의 잔사유고도화시설 및 올레핀하류시설이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전법령법인-99, 2020.03.25

■ 질 의

- A법인이 OO시로부터 2013.12.19.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2016.12.26.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고시되었으나
 - － 지구단위계획 환원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및 교육청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OO시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협의 중이며
 - －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XX구청에 공익적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한 경우
 - －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서면법인-2005, 2020.02.27

■ 질 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관세청,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수출 도전하세요"

관세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 업체인 이베이·쇼피·큐텐의 담당자도 함께 설명에 나선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베이(ebay)는 미국, 쇼피(Shopee)·큐텐(Qoo10)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다.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6시간동안 진행된다.

참석 비용은 없다.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이르면 2022년 도입

정부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도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비자가 자기가 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15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된다.

그러나 거래 당 금액제한이 있을 뿐 거래횟수나 면세한도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 해외직구 면세품을 되팔아 탈세 이익을 누리는 소위 되팔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최상위 A씨는 월평균 236회 등 올해 들어 총 1825건의 해외직구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연간 해외직구 면세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자료 축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내년 1년간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2022년 적정 면세한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 해외직구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 종부세도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19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을 할 부분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현재 5년 이상 실거주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국세청, 2020. 10

1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 등록이란?

-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자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의 경우)

-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 ▶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허가·신고·등록 대상 여부 확인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 기업 민원 기업 민원 행정 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 인허가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2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란?(www.hometax.go.kr)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 회원 가입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한 회원 가입

② 세무서 방문 가입 :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 2만원, 법인세 2만원)

■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 전자고지를 받거나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MyNTS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각종 세무정보(세금 신고·납부, 우편 발송된 고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홈택스 앱]

국세 증명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발급 신청 * 2020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도 제공
사실 증명 신청	▶ 사실증명(12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 * 신청 후 3 근무시간 내 처리(사실 여부 검토 필요)
민원신청 결과 조회	▶ 모바일 민원실에서 처리된 사무를 모두 조회
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신청	▶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민원증명 원본 확인 (수요처 조회)	▶ 발급번호 혹은 바코드로 원본 확인 * 바코드로 확인시 마크애니(MaSmartDetector) 설치 필요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 별도 로그인 없이 실시간 대기인원 조회 (2019년 4월부터) * 민원이 집중되는 50개 세무서에서만 현황 제공(2020년 중 전관서 확대 실시 예정)
민원증명 발급 예약(방문 수령)	▶ 민원증명을 예약신청하고 편한 시간(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내)에 방문 수령 * 단,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는 평일 09:00~18:00 운영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정항목에 대한 서비스 * 상호, 업종(인허가업종 등 제외), 사업장 소재지(자가 → 자가만), 연락처 등
휴·폐업 신고	▶ 즉시 휴·폐업 신고 가능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재개업 신고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3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국세증명		온라인 발급시간	발급 창구					
			홈택스	모바일	무인민원	민원 24	민원 우편	어디서나
① 사업자등록증명		연중 24시간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증명서		연중 08:00 ~ 22:00						
⑤ 납부내역증명			○	○	○	○	○	○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 소득확인증명서								
⑩ 표준재무제표증명			○	○	×	○	○	○
⑪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 모범납세자증명 ○ ○ ○ ○ ○ ○		연중 24시간	○	○	○	○	○	○
⑬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⑭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	○	○	○
⑮ 사실 증명	유 형	[신청] 연중 09:00 ~ 24:00						
	(1) 신고사실 없음					○	○	○
	(2) 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체납내역							
	(4)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5) 사업자등록변경내역							
	(6) 대표자등록내역	[발급] 근무시간 3시간 내 (신청 후)	○	○	×			
	(7) 공동사업자내역							
	(8)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	×	×
	(9) 전용계좌개설여부							
	(10)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11)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12) 총사업자등록 내역							

※ 영문 증명은 ① ~ ⑧, ⑩, ⑬이 가능하며, 방문과 홈택스, 모바일에서 발급함

발급 창구	이용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① ~ ④, ⑫는 공인인증서 없이 회원 로그인으로 발급 가능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 국세증명」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식 후 신청	
민원24	「정부24(www.gov.kr) → 민원서비스 → 중앙민원」에서 민원서비스명 입력 후 발급	
민원우편	우체국에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우편요금 발생)	
어디서나	주민번호 및 지문 인식,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대표자) 이용 가능	

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의무발행 업종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밀줄 친 업종은 2019.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기타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 차량 운영업

- ▶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 2019.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7년 이전은 500만원, 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납부세액 한도)
-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 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세요.

5 부가가치세 안내

■ 부가가치세란?

-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 역업(무도학원은 2011. 7. 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 7. 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 내에 주고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 부터 2.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제조업

*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 됩니다.)

■ 신고·납부방법

-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 납부기한
일 반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 ~ 4.25.
		제2기 예정신고(7.1.~9.30. 실적)	10.1. ~ 10.25.
간 이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를 참조

■ 세액계산 방법

-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세액} (\text{매출액} \times 10\%) - \text{매입세액}$$

-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액} \times \text{부가가치율} \times 10\% - \text{공제세액} (\text{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times \text{부가가치율})$$

-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5-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발급의무대상	전자발급 의무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 부터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 한함) * 2019. 7. 1.부터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그 다음해 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2019. 1. 1.부터 시행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
|-----------------------|----------------|
|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④ 작성연월일 |

-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종합소득세 안내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9년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 장부의 비치·기장

-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2019년 귀속 기준)

업종구분	직전년도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육탕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육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7천5백만원



-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 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제도

- ▶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기한 : 1.1. ~ 6.30.(신규), 확정신고 기한까지(변경, 추가)
-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128 ④)

6-1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클릭

■ 경비율의 적용방법

-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 ①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2] ... ②

⇒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2018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일자리 안정자금}) - (1 - \text{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2천4백만원	7천 5백만원
--	--------	---------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21년 5월(2020년 귀속) 신고시 기준금액(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를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단,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합니다.

7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사업장현황신고란?

-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

-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 *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제출서류

-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 적용대상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므로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 ▶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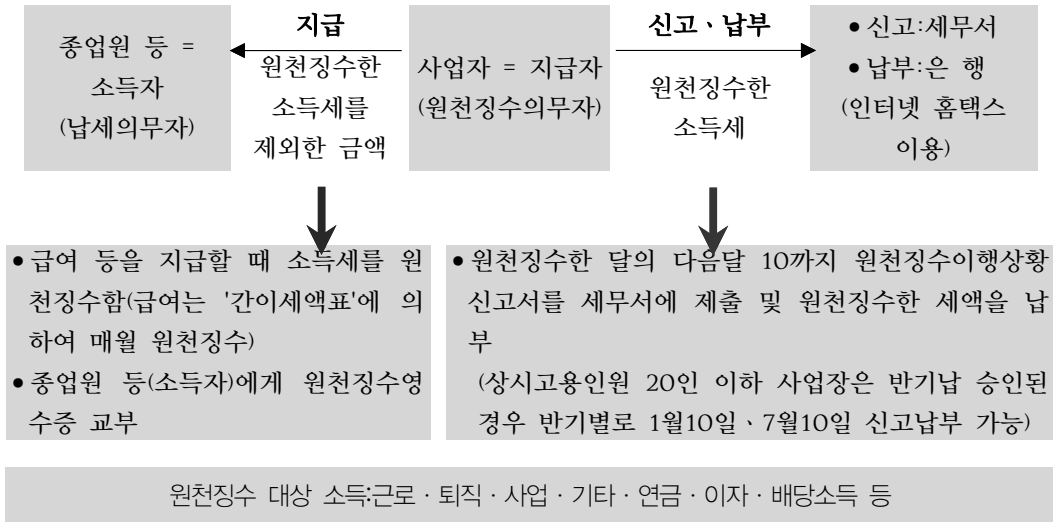


8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란?

- ▶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3월 10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월·4월·7월·10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근로·사업(봉사로 포함)·퇴직소득: 다음년도 3.10.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다음년도 2월말일
- ▶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지급명세서」 서식 출력 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9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운영

-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나눔세무(회계)사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126 → 3번으로) ▶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 창업자 멘토링

-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창업일부터 다음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57)

10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



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권리보호요청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세무조사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반 국세행정	•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공통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	조사반(담당자) 교체, 징계 요구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p>●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p> <p>-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p>
<p>●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p> <p>-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p>
<p>● 압류해제 지연처리</p> <p>-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p>
<p>●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p> <p>-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p>

11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절차상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 심의대상

세무서 · 지방국세청	국세청
가. 중소기업납세자*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가~다’에 대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재심의
나. 중소기업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마.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중소기업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 · 법률 ·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심의요청 및 결과 통지

	세무서 · 지방국세청	국세청
심의요청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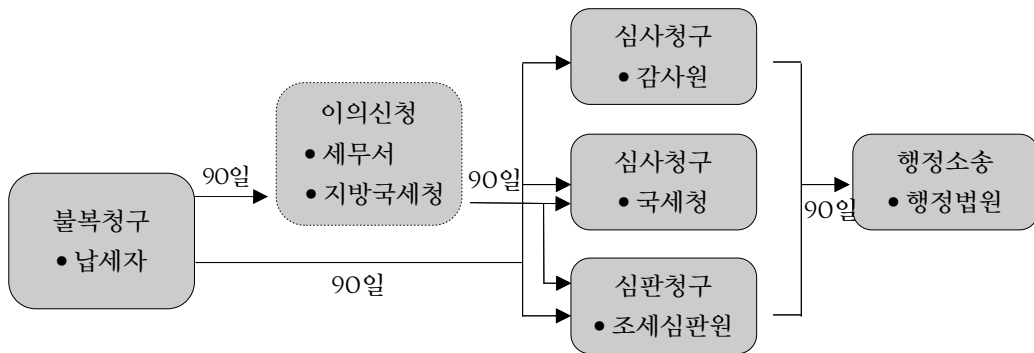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의 처리절차 · 작성요령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국번없이 126 ▶ 3번을 누르면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금융감독원, 2020. 10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 종전에는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였으나,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DB화*1하여 상세히 공개*2
 - *1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화
FSS지적사례발표기관/2008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 *2 사례별로 ①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②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③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④감사인인 감사절차 미흡사항, ⑤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2019.12월에 최근 2년간(2018~2019년) 감리지적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금번에는 추가로 3개년(2015~2017년) 지적사례 34건을 공개
 - 주요 지적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식 미기재 3건, 기타 7건임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 ①진행 중인 공사에 소요되는 총예정원가가 변동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 누적발생원가 / 총예정원가) 및 매출(= 공사수익 × 공사진행률) 왜곡, ②실제 제조·가공 및 이동 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을 관계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매출로 인식
-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①전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면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과소계상, ②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

-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 손상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유무형자산 등 관련) 투자자산(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

3.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 감리지적사례 DB를 보다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검색 기능을 개선
 - 정보이용자가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①게시물 항목과 ②검색창을 개선
 - 기업이 감리지적사례를 쉽게 찾아 감독당국의 판단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중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

4. 향후계획

- 감리지적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
- * (2021년 1분기) 2020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2021년 3분기) 2011~2014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붙임 - 2015~2017년 감리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1 목 록

①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 관련(12건)

1. FSS/2008-01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2. 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3. 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4. 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5. 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6. FSS/2008-06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7. FSS/2008-07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8. 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9. 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10. FSS/2008-10 수익 기간귀속 오류
11. 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12. 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② 재고자산 관련(1건)

1.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③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6건)

1.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2. 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3.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미인식
4. FSS/2008-17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5. 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6.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④ 유·무형자산 등 관련(3건)

1. FSS/2008-20 유형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2. 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3. 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⑤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3건)

1. FSS/2008-23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FSS/2008-24 소송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3. FSS/2008-25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⑥ 기타자산, 부채, 자본 관련(2건)

1.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27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⑦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3건)**

1. FSS/2008-28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2. 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미기재
3.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기재 오류

⑧ 연결재무제표 관련(2건)

1. FSS/2008-31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 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⑨ 기타 지적사항(2건)

1.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34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2 예 시**감리지적사례 FSS/2008-02 :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총예정원가 과소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7.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항공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3년 회사는 항공 관련 부분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처는 당초 일부 부분품만 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주요 부품 제조와 최종 조립은 직접 수행하려 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납기 연장 등 2차례 계약을 변경하고 회사 조달 범위를 확대하였다. 회사는 해당 계약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총예정원가에서 일부 예정원가를 누락하고, 제작 오류로 인해 추가된 예정원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6년부터 '17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납품이 이루어진 일부 부품 예정원가를 총예정원가에서 누락하고 제작 오류로 인해 증가한 예정원가를

총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예정원가를 적절히 산정하지 않아 '16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17년 1분기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은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1 및 38에 따르면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하며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여 반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 후 사건) 문단 3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담당자는 예정원가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부문장과 재무관리팀도 실행예산의 세부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납기 지연 및 납품항목 증가로 인한 예정원가 증가분을 누락하였다.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검토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제작오류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예정원가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확정·승인하여 총 예정원가를 과소 계상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7,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② 동 사례에서 감사인은 '16년부터 수주산업과 관련하여 핵심감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예정원가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통상적인 수준의 표본만 추출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예정원가 실행예산서의 세부근거 자료와 프로젝트별 실제 진행현황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예정원가 작성 및 검증시스템을 갖추어 예정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변경 시 예정원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으로 인해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초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감리지적사례 FSS/2008-17 :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쟁점 분야: 파생상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5년말 현재 코넥스 상장회사로서,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을 당해부터 실시한 업체이다.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이하 '전환우선주 등')를 발행한 상황이며, 코스닥 상장 시 유통주식수가 부족하다는 상장주간사의 권고에 따라 당시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전환우선주 등 포함)에 대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전입을 통한 1:1 무상증자를 '15년 4월 실시하였다.

회사는 전환우선주 등을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전환권)으로 분리하여 주계약 부분은 유효이자율에 따른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전환권은 외부평가사에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였다. 외부전문평가기관(AAA주, 이하 '평가사')는 평가기준일 시점 발행우선주 1주(전환사채: 액면금액 1만원)에 내재된 전환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때 전환권 평가시 '15년 4월 무상증자 효과를 미반영하여 회사는 전환권 가치를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15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전환우선주 등의 전환권 가치 산정 시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발행가액 등)의 오류로 인해 전환권 금액이 과소계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동 금액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파생상품부채, 자본잉여금을 각각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동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회사는 주계약과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최초인식시점 및 그 이후 공정가치로 적절히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사의 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잘못된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A48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과 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 수행한 업무에 원천데이터가 유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원천데이터의 관련성·완전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가 평가사에 무상증자 내역을 포함한 제반 자료를 제공한 후 무상증자 효과 반영과 관련한 회사-평가사 간 의견교환까지 한 사실관계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사의 전환권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에 무상증자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외부전문기관이 작성한 전환권 등의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발행가액 등)의 오류로 인해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과소·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가사의 평가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이후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여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16일 (금)	10월 19일 (월)	10월 20일 (화)	10월 21일 (수)	10월 22일 (목)
미 달 러 (USD)	1144.60	1145.60	1142.20	1139.70	1133.70
일 본 엔 (JPY)	1086.22	1086.70	1083.01	1080.03	1083.90
영 국 파 운 드 (GBP)	1476.82	1480.00	1478.86	1476.14	1489.29
캐 나 다 달 러 (CAD)	865.51	868.83	865.93	868.67	862.52
홍 콩 달 러 (HKD)	147.69	147.82	147.38	147.06	146.28
위 안 화 (CNH)	170.66	170.61	170.65	170.62	170.52
유 로 화 (EUR)	1340.04	1341.90	1344.20	1348.32	1344.40
호 주 달 러 (AUD)	811.35	811.54	806.96	804.17	806.68
싱 가 폴 달 러 (SGD)	841.59	843.38	840.90	840.05	837.08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75.44	276.15	275.86	274.66	273.61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 2020. 10

- 정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 새롭게 마련된 구제절차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법 제7조~제11조)

- 사업장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용상 차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항, 제6항 등)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 (공포일 즉시 시행)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자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정부는 임금채불 근로자가 채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직자 체당금 신설 >

-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①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21년) → ②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100% 미만('22년) → ③최저임금 120% 미만('23년)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일 즉시 시행)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 우선지원대상기업 2/3(67%), 대규모기업 1/2~2/3(50~67%) 지원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기업 67~75% 지원
-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에 한하여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 *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845억원 반영(추경 통과 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 6476억원)
-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 1 - 남녀고용평등법 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주요내용

<1>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 절차

- (신청 대상)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9개 조항 대상)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금지(제7조~제11조)
 - **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제14조제4항·제14조의2제1항),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제6항·제14조의2제2항)
- (입증책임)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2>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등 절차

- (조사·심문)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사·심문을 해야 하며 전문적인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조정·중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 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쌍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음. 이때 조정·중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3〉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그 확정

- (시정명령) 조사심문 절차 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기각 결정
 - － (배상명령 등) 시정명령 내용에는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피해 내용을 살펴 적절한 시정 조치(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등)가 포함되도록 함
- (확정) 지방노동위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절차를 규정

〈4〉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 (이행상황의 확인) 시정명령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종결한 때(취하 제외)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

〈5〉 차별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 시정요구

- (시정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지도·감독, 차별 관련 진정 사건 조사 등에 따라 차별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사업주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
 - － 이를 통해 사업주의 차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

〈6〉 차별에 대해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 (시정의 확대) 고용상 성차별은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성격을 고려,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 해당 사업장 내에서 시정명령 대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처한 다른 근로자 등을 보호

〈7〉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
 -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과태료 부과